

조세 · 재정 BRIEF

2011. 6. 1(수)

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

요 약

-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언급하면서 대학 학자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
- 다음에서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문제점, 수요자 부담방식의 특징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함
- 교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,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 학자금 조달 방식으로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(ICL)가 가장 우월함
 - 2010년에 도입한 든든학자금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, 앞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요 학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
- 현행 지원제도 중 역진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들을 개선하여야 함
 - 소득세 대학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음
-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민간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

서론: 최근의 반값등록금 논의

- 최근 한나라당의 원내 대표가 ‘반값등록금’을 언급하면서 그 의미, 실현 방법과 가능성,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
 -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며,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정도의 개괄적인 방향만 제시됨
 -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추가 감세 철회 등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임

- 민주당도 등록금 인상 제한,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(ICL) 개선,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

-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조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장학금을 확충하면 기존의 지원과 합하여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함¹⁾

- ‘반값등록금’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장학금 확대와 ICL 제도에 초점을 맞춤
 - ‘반값등록금’이라는 용어가 주는 첫인상은 모든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것임
 - 그러나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인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의 등록금을 ‘반값’ 수준으로 강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
 - 결국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여 동등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수밖에 없으며 여·야를 막론하고 현실적 대안으로 장학금과 ICL을 주목하는 것으로 판단됨

-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가 장학금과 등록금의 취업 후 상환제도(ICL)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함

1) 조선일보 2011. 5. 26일자

- 제2장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제3장에서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한 후, 제4장에서 장학금과 ICL, 현행 등록금 제도 등 학자금 조달 방법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.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

II 정부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

1. 국립대학에 대한 학비 지원

-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학 학비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국공립 대학에 대한 운영 지원임
 - 4년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의 56.9%이며, 전문대학은 59.4%임
 - 정부의 국공립대 지원이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사립대에 비해 40%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음

국공립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비교

	국공립(천원)	사립(천원)	국공립/사립(%)
4년제	4,292	7,531	56.9
전문대	3,612	6,080	59.4

자료: 교육과학기술부, 「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기본계획」, 2011. 1

- 2011년 정부의 예산 중 국립대학 운영지원비는 2조 3,504억원이며, 그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1조 7,718억원이고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비가 1,470억원임

2.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

- 국가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차상위계층 장학금,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구분됨
 -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(미래드림)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며, 45,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음
 - 차상위계층 장학금(희망드림)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인 계층에 대해 지원됨
 - 2011년에는 3~4학년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, 1인당 지원규모는 학기당 115만원임
 - 25,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2011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됨
 -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은 소득이 5분위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됨
 - 성적이 95%(A+) 이상인 학생 1,0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1천만원, 90%(A0) 이상인 학생 18,0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500만원씩 지급함

- 2011년 예산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2,025억원, 차상위계층 장학금이 287억원,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1,000억원으로 총 3,312억원임

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예산(2011)

(단위: 명, 억원)

	지원인원	예산	비고
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	45,000	2,025	
차상위계층 장학금	25,000	287	'11년 사업종료
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	19,000	1,000	

자료: 교육과학기술부, 「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」, 2010. 10

- 그 외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과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이 있음
 -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하여 750억원 규모이며, 대통령장학금·이공계국가장학금 등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예산은 1,095억원임

3. 학자금 대출제도

-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(ICL, 든든학자금)와 일반 학자금 대출을 포괄하여 학자금 대출 업무를 한 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음
- 학자금 대출 목적의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예산은 2011년 3,218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,067억원 줄어들었음
 - 특히 ICL 채권 대납이자가 2010년 3,015억원에서 1,117억원으로 1,898억원 줄었음
 -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행 첫해인 2010년에 ICL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으며, 이를 반영하여 예산액을 축소하였음
 - 2010년 이용자 23만 1,980명으로 당초 목표한 70만명의 32% 수준
- ICL은 소득이 7분위 이하, 학점 B 이상, 대출 당시 35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,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(연 200만원 한도)를 대출받을 수 있음
 -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, 등록금도 250만원 무상으로 지원받음
 - 소득 1~3분위의 경우에는 생활비에 대해 무이자가 적용되고, 소득 4~5분위는 생활비도 ICL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, 6분위 이상은 생활비에 대해서는 일반대출방식을 적용함
 -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하는데, 2011년 1학기에 적용된 금리는 4.9%임
 - 졸업 후 소득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때부터 상환을 시작하며, 매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소득금액의 20%를 상환함
 - 2009년 기준 연소득 3천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 239만원, 연소득 4천만원인 경우 연간 상환액 419만원

4. 소득세 대학교육비 공제제도

-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납부시 등록금 납부액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표에서 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, 이는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짐

6 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

- 보조율(한계세율): 38.5%(과표 8,800만원 초과), 26.4%(4,600만~8,800만원), 16.5%(1,200만~4,600만원), 6.6%(1,200만원 이하)

□ 한국조세연구원의 TAXIM 모형을 통해 추정된 바에 의하면 대학교육비 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은 2009년 기준 6,460억원임

- 정부가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초·중·고를 포함한 교육비 특별공제액 총액은 2009년 1조 2,299억원이고 2011년 예산은 1조 3,787억원임

5. 기타 학자금 지원 사업

□ 교과부 외에 7개 부처에서 총 1조 7,853억원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⁾

- 이들 지원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



현행 학자금 지원제도의 특징과 문제점

□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

- 교육부와 타 부처의 국립대 지원, 장학금 지원, 학자금 용자지원,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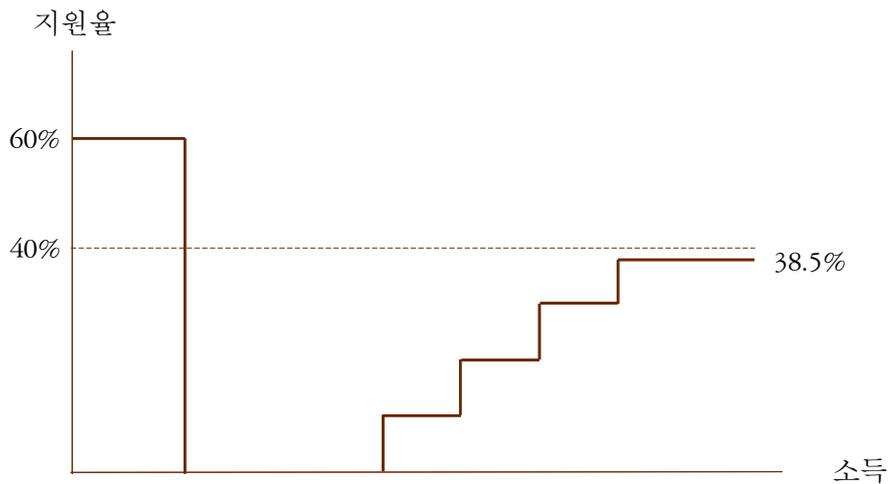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비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이 79.3%(2009년)로 OECD 회원국 중 칠레(85.3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

- 등록금 수준은 국립대 4,717달러, 사립대 8,519달러로 미국(각각 5,943달러, 21,979달러)에 이어 두 번째임
- 이 점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됨

2) 교과부,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행계획」, 2009. 11. 19

-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진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여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으며,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
 - 국립대 지원 등 분배효과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세금 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효과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음
 - 기초생활수급자는 4년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등록금의 60%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음
 -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데, 이 제도는 2011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
 - 아래 계단 모양의 그림은 세금공제의 효과를 나타낸 것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의 6.6~38.5%의 보조를 받으며,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보조를 받음

저소득층 장학금과 세금공제의 학자금 지원효과



주: 1) 2011년 종료되는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제외
 2) 지원율(%)=국가지원/등록금

IV 대학 학자금 조달방식의 평가

- 대학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
 - 첫째, 국가에서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법

8 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

- 둘째,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료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는 방법(등록금 선불제)
 - 셋째, 학생이 교육을 먼저 받고 졸업한 후에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상환하는 방법(등록금 후불제)
- 국가의 지원은 국립대 운영, 사립대학 재정 지원, 장학금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현재 논의의 초점이 장학금에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장학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함
- 둘째와 셋째 방법은 수요자가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나
- 세 번째 방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증에 의해 대출이 허용되고, 이자 등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개입될 수 있음
 -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라고도 하며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대출한다는 관점에서 ICL(Income Contingent Loan)이라고도 함
 - 호주에서는 이를 등록금 후불제라고 하고, 교육받기 전에 납부하는 것을 선불제라고 함
-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거의 전담하였는데, 교육비 상승과 학생 수 증가, 그리고 국가재정 악화로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아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됨
- 그 과정에서 대학교 학비를 누가,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, 다음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³⁾

1. 정부 지원(세금)

-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
- 첫째, 대학교육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인적자본을 축적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정부는 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
 - 둘째, 자력으로 학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도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음

3) 안종석·박노욱·정재호·김진영(2006) 참조

- 저소득층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
- 저소득층이 교육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인적자본 축적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인적자본 축적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음

□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므로 첫 번째 이유 즉, 교육수요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

- 대학교육이 보편화될 상황에서 필수재화의 성격이 강하여 가격탄력성이 낮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
- 아직은 사적 이익(또는 혜택)에 비해 비용이 너무 커서 대학교육 받기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

□ 두 번째 이유 즉,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하며,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였음

□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점 외에도 국가 장학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

- 학교 등 민간부문의 장학금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
 -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장학금을 지급할 유인을 가지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지양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음
 - 학교 성적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부유한 가정 자녀일 가능성이 큼
 -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생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음
- 과다공급,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교육의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
 -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는 학교와 학생의 질적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
-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함

10 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

- 국고 지원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, 그 이유는 계속 증가하는 교육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임
- 특히 대학 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지원비율을 약간만 높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개별 수혜자가 느끼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음

- 이와 같은 논리를 떠나 이미 대학교육이 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데, 그 부담이 커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음
 - 실제로 일반 대중과 정치인에게는 이 논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일 것으로 판단됨
 - 그러나 형평성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소요되는 자금을 대학교육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으며,
 - 효율성 관점에서는 그러한 자금의 지원이 대학교육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, 오히려 대학 장학금 구축, 방만한 운영 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

2. 등록금 선불제

- 교육수요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
 - 저소득층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,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적자원의 축적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
 -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해왔던 것처럼 등록금 선불제를 통해 대학교육을 이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3. 등록금 후불제

- 대학 학자금을 국가 지원에 의존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와 등록금 선불제에 의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후불제임
 - 후불제는 궁극적으로 수요자가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,

-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므로 효율적이고,
- 소득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교육비를 조달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소수요를 예방함

4. 다른 국가들의 동향

- 이상의 논의에 비취볼 때 대학 교육비를 국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요자에게 부담시키고 후불제를 통해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
- 전통적으로 국고에 의존하던 서구 유럽 국가에서도 1990년대부터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남⁴⁾
 - 호주, 벨기에, 프랑스, 영국, 네덜란드 등에서는 등록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
 -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도 수업료가 크게 증가하였음
 - 벨기에, 영국,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 대신 학자금 용자를 확대함
 - 이러한 변화의 결과 대학교육비에서 공공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81.2%(1995년) → 75.7%(2000년) → 69.1%(2007년)로 크게 축소됨

V

정책 방향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대학 교육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공급과 수요, 그리고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
 -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충분한 질과 양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재원 조달 체계를 갖춰야 함
 - 교육비의 수요자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서 수요가 과소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
4) jacobs and van der Ploeg(2005)

12 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

○ 지원방식에 따라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재분배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
□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학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

1. ICL 중심의 학자금 지원

□ 학자금 지원 방식 중 수요와 공급, 소득분배를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우월한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은 등록금 후불제임

□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과 등록금 후불제도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든든학자금제도를 도입하였음

□ 이 제도는 높은 이자율과 처음 시행함에 따른 인식 부족, 자녀에게 학비를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관념 등으로 인하여 첫째의 활용도는 예상보다 크게 낮았음

□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든든학자금제도가 저소득층의 주요 학자금 조달 수단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

○ ‘학비를 자녀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관념’과 같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독특한 요소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촉진해야 함

○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장학금보다는 든든학자금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예, 든든학자금의 이자 지원, 든든학자금과 연계한 장학금 지원 등

2. 현행 제도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분배효과 제고

□ 현행 지원제도의 역진적 효과를 개선하고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

○ 역진적인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함

-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,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,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- 미국의 경우 고소득층에게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
- 이공계 지원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장학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
- 개별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유인이 있는 우수학생(예, 성적 A+, A0)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장학금은 성적보다 소득기준에 초점을 맞춰야 함
- 국립대 지원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국립대 등록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
3. 국가 지원 확대시 고려사항

- 등록금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학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
- 이 경우 먼저 ‘반액’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
 -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‘반액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며, 역진성 문제가 발생함
 - 고소득층의 경우 현행 등록금 수준이 교육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하고,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계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재원은 교육비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비의 국가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는 소득재분배에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됨
 -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, 든든학자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음
 - 다른 복지지출과 비교하여 대학 교육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

14 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

- 법인세 수입으로 대학교육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
- 교육비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
 - 소득세 대학교육비 공제의 폐지 또는 개편
 - 고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 인상
 -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등교육예산(교육재정교부금)의 일부를 대학교육 지원으로 전환

참 고 문 헌

교육과학기술부, 『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』, 2010. 10

안종석 · 박노욱 · 정재호 · 김진영, 『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』, 연구보고서 06-09, 한국조세연구원, 2006

Jacobs, Bas and Fredrick van der Ploeg, "Guide to Reform of Higher Education: A European Perspective", CEPR Discussion Paper, No. 5327, November 2005

OECD, Education at a Glance 2010, 2010

작성자 : **안종석**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(02-2186-2200)